

韓-美, 2%p 금리격차 유지... 국채·시중 잠재리스크 '축각'

美 기준금리 동결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집중
파월 의장 "금리인하 고려치 않아"

韓 국채금리, 美 동조화 현상 보여
한은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 향후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5월까지 5%포인트(p)를 인상한 뒤 6월 동결, 7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았다. 이후 9월에 결정한 동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기준금리 인하 고려 안해"

연준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가장 먼저 물가 둔화가 꼽힌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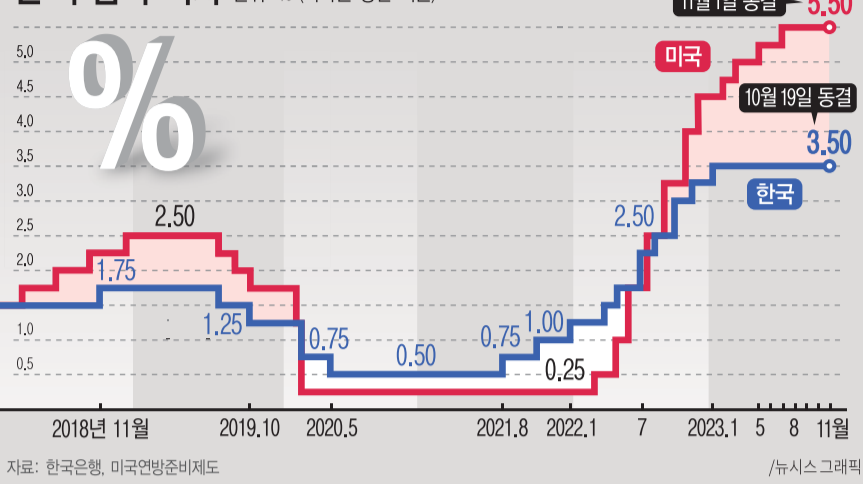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 워싱턴 연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같은 기간 9.1%에서 3.7%로 하락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 지난달 19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커지고,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이 오르는 등 기준금리 추가인상 효과를 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오르는 등 금융여건이 긴축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을 불러

한미 금리 격차



왔다는 완벽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변동성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금리가 올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2월까지 동결이 이어지면 정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파월의장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현 기준금리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라며 "금리를 동결한 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현재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韓, 역대 최대 금리격차 지속

미국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한국과의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2%p를 이어나가게 됐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원달러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간 사태로 10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5달러로, 지난 7월 80.5달러와 비교해 10달러가량 올랐다.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리며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에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채 금리는 한국 국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동조화)을 보인다. 특히 채권의

만기 기간이 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 이날 오전 5년만기 국채금리는 4.043%로 3개월전인 3.711%보다 0.332%p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국채금리 불안이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4분기 고금리예금 만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신경쟁심화로 대출금리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대비 3조6825억원 늘었다. 금리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626조6173억원)은 전달 대비 3조2771억원, 대기업 대출(137조2992억원)은 4조3086억원 늘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완화됐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필요성(고금리 장기화)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국내의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은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 키워야"

전체 인구 절반 수도권 집중
자연증감 아닌 청년층 이동 증가
"규모보다 특화 통해 경쟁력 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출산율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6%는 국토 11.8%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사망 등 자연증감이 아닌 청년층(15~34세)을 중심으로 지역간 이동이 증가한 탓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은 기대소득과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53만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3.8%포인트(p)에서 6.7%p로 벌어졌다.

개인특성을 보면 여성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으면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후 수도권 이동 확률도 높았다. 여성이면 대졸후 비수도권 잔류 대신 수도권 이동 확률이 7% 상승했고 부모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동 확률이 19% 올랐다. 아버지가 대학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원율 이상이면 36% 상승했다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 수도권은 '경쟁 치열'...출산율 감소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비수도권의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수도권의 출산율을 지연시켜 전체적인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가 먼저 이뤄져 출산율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0.76명, 광역시 0.81명, 도지역 0.94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유출로 비수도권의 출산손실은 2021년 기준 호남권 1만2000명, 동남권 7900명, 대경권 72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전체 출생아수의 49.7%, 21.9%, 31.6%에 달했다.

◆거점도시 균형발전시, 전국인구 50만명 증가

이에 따라 보고서는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제공을 위해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 어려운 점,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줄고, 거점도시로 이동이 증가하면 30년 후인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절반아래(49.2%)로 하락했다.

거점도시에서 수도권 이동이 현재의 10%로 줄고,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 이동을 가정한 경우다. 전국 인구는 약 50만명 증가했다.

반면, 현재의 이동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정 하에서는 현대 50.6%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53년 53.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요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하고,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하고 권역내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거점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도모하고, 중소도시의 인프라는 규모보다 특화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소비자물가 3.8% ↑... 유가 등 불확실성 영향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7월 이후 지속 상승세... 오름폭 커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 상승하며 오름폭이 3개월 연속으로 확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 대외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8월(3.4%), 9월(3.7%)에 이어 10월까지 3개월째 확대되는 흐름이다. 또 상승폭이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7.3% 올랐다. 곡물과 과실이 각각 12.8%, 25.8% 치솟으며 농산물 물가가 13.5% 상승했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사이 최대 상승폭이다. 주로 사과(72.4%)와 상추(40.7%), 토마토(22.8%), 굴(16.2%), 쌀(19.1%)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3.0% 상승했다. 굴(-6.6%), 전복(-6.7%)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오징어(15.6%)와 고등어(5.7%) 등이 올랐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0.1%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이 13.2% 올랐으나 국산 쇠고기(-3.1%), 수입 쇠고기(-0.1%), 돼지고기(-0.2%) 값이 모두 내렸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가격 오름 조짐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공업제품은 3.5% 상승했다. 아이스크림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림(15.2%), 우유(14.3%), 빵(5.5%) 등의 가격이 오르며 가공식품은 4.9% 상승했다. 휘발유(6.9%)는 올랐으나 경유(-7.9%), 자동차용 LPG(-11.8%), 등유(-9.8%)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석유류 물가는 1.3% 내려갔다. 다만 하락폭은 9월(-4.9%)보다 축소됐다.

전기료(14.0%)와 도시가스(5.6%), 상수도료(4.6%) 등 전기·가스·수도는 9.6% 올랐다. 지난해 10월 요금인상 기저효과로 전월(1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상승했다. 유치원 납입금(-9.7%), 국제항공료(-4.0%)는 내려갔으나 시내버스료(11.3%)와 택시료(20.0%)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와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3.7%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물가에 대해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